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8
----------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 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마련

3. 주요내용

- 가. 2040 서울의 미래상
- 나. 6대 공간계획
- 다.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라. 부문별 전략계획

마. 권역별 계획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5. 검토의견

“개 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붙임1)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¹⁾,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하, 2040 계획안)은 지난 ’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의 미래상²⁾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및 이와 연계된 토지이용의 원칙과 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의 발전 방향 등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함

1)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의 의의는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어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공간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2) 사회 여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도시·건축·환경·교통 등 100명 여명의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수립



- 2040 계획안은 당초 '19년에 착수되어 시민계획단(120인)을 구성하고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과제를 도출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작성('20.6.)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과 새로운 시정 출범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³⁾하여 계획안을 수정한 후 '22년 3월 계획안을 발표하고 6월 공청회를 실시함

3)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22.1.)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 및 계획의 핵심 가치에 대한 재검토 실행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2019~2022)

구분	시민참여	공공 참여	계획안 작성
2019. 3월			재정비 착수
5월	사전기획, 자료구성		기초조사 및 자료 수집
8월	시민계획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수립추진위원회 발족
10월	단 운영 (1·2차) (1·2차)		
11월			
2020. 3월		자치구 의견수렴	계획과제 도출
6월			공간계획 도출
11월			
4월			계획 수립 잠정 중단 서울시 새 시정 출범
2021. 5월			
12월			
2022. 1월	미래상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계획안 수정 작업 추진
2월	미래상 확정		
3월			대외발표(미래상·6대 공간계획 확정)
4월		실·본부·국 및 자치구 의견수렴	
5월			의견수렴 & 계획안 수정
6월	공정회 실시		
7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체계



“계획의 주요 내용”

- 이번 의견청취안은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기본방향으로,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혁신, 도시계획 대전환, 기반시설 입체화, 미래교통 인프라 등 6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 등을 제시함

○ 보행 일상권 조성

- 보행 일상권은 도보 30분 범위 내 주거·업무·교육·쇼핑·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서,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다양한 용도·기능을 갖춘 자립적 생활권으로 개편함



○ 도시계획 대전환

-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밀도와 용도를 규제하는 용도지역제에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하여 복합적 기능 배치가 가

능토록 도시계획체계를 전환⁴⁾하고, 도시경관 관리에 일률적 높이
규제가 아닌 대상지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정성적 계획으로
변경함(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 기준 삭제, 위원회 심의로 높이계
획 결정)

○ 중심지 기능 혁신

- 2030 계획의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되, 가용공간부족·계획규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3도심을(서울도심·여의도·강남) 규제 완화,
입체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4대 신성장 혁신축(청년첨단 혁신축(동북권), 감성문화 혁신축(서북권),
국제경제 혁신축(서남권), 미래융합 혁신축(동남권))을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심지체계와 주변 산업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주거·상업·
여가 등과 산업이 융복합된 도시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함



4) 용도지역제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임

○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도모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07~'11)에 이어, 한강 본류 뿐 아니라 지천·소하천까지 접근성 및 장소성을 높이고 배후주거지와 연계하여 수변과 도시 공간이 일체화된 수변도시를 도모함



○ 기반시설 입체화

- 장기적·단계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또는 지상데크 설치 등을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새로운 가용지 확보, 지역 간 연결성을 도모함



○ 미래교통 인프라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환경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기반, 모빌리티 허브(미래교통수단과 G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와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⁵⁾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함



5)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 활용

“계획의 특징과 평가”

-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도시공간·토지이용·도시관리 등 **공간계획을 강화**하여, 소통·배려·참여의 비교적 정책 가치에 중점을 둔 2030 계획(붙임2)에 비해 정책의 물리적 구현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보다는 **계획 재량**을 높여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시대 여건과 시장 대응, 지역 맞춤형 등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보행 일상권, 용도지역제 유연화(도시계획 대전환), 도시 기능의 고도화(중심지 기능 혁신), 기반시설 입체화 등 **토지이용의 유연성·복합성·입체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고, 디지털시대·비대면문화 등으로 주거·업무 등 공간 경계가 희석되는 대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능 충족 수요가 증가하며, 융복합시대 새로운 용도 급증과 용도의 명확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토지이용의 경직성 탈피는 시대적 공간 수요 반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하다고 보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재편 등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정리하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전환’과 ‘토지이용 효율성·활용도 제고’로 특징지을 수 있고,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에서 다양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상업·업무·교육·여가의 도시기능의 촘촘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재해, 감염병 등 시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⁶⁾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⁶⁾ 우리나라도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⁷⁾하고 있는 등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의 비중과 구체성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됨

도시에서 70%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대응은 서울시의 중장기적 주요 의제로서,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도시방재 계획을 비롯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68.8%, '18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과 약 19%(19.2%, '18년)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각각의 탄소저감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방재-건물-교통-토지이용-공간계획의 연계성 제고 등 기

6) 파리협정(2015)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CO2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136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함

7)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20.12. 환경부)

후변화대응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공청회('22.6.24.)에서 제시된 전문가·시민의 주요 의견은 불임자료로 갈음함(불임3)⁸⁾

담 당 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	--------------------------

8) 기후환경대응과 공간계획의 연계, 생활SOC 적극적 투자, 시민 복지의 가시적 계획, 도시의 다양성 등이 전문가·시민의 주요 의견으로 제시됨

<붙임 1>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8의3.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붙임 2> 2030 서울플랜 vs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료: 도시계획과)

- 기존 시민 친화형 계획에서 계획의 실현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침적 성격을 강화
-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

구분	내용	2030 서울플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개요	서울 시장	박원순	오세훈
	수립 시기	2012~2014	2021~2022
	구성 체계	미래상-핵심이슈별 계획-공간계획-생활권계획-계획의 실현	미래상-6대 목표- <u>부문별 전략계획</u> -공간계획-권역별 계획-계획의 실현
	수립 방향 및 원칙	■ 계획 초기부터 시민과 함께 수립 ■ 서울시 전 부서의 협력적 계획 ■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운영	■ 팬데믹, 기후변화, 기술발전 등 신규 여건변화를 계획에 반영 ■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의 유연성 강화 ■ 서울의 당면과제에 대한 도시계획의 적극적 역할 수행
	특징	■ 공간·물리적 계획 + 인문학·철학적 가치 반영 ■ 생활밀착형 이슈 중심 ■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도입 ■ 기본계획 역할 재조명 → 서울형 계획체계 정착 (계획 체계 및 수립과정이 타 시·도에 확산, 해외도시 관심 증대)	■ <u>공간계획적 특징 강조</u> - 30분 자립생활권 단위 조성으로 미래 생활양식의 변화 대응 -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제시 - 유연한 용도지역제로 전환 - 수변중심공간구조 재편 ■ 부문별 전략계획으로 실·본부·국 계획 수립의 <u>지침적 성격 강화</u>
추진 체계	계획 수립 체계	■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 위원장: 행정1·2부시장, 총괄계획가	■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 위원장: 서울시장, 시의회의장, 총괄계획가 - 총괄조정분과: 총괄계획과, 시의회, 기초실장, 도시계획국장, 분과장, 시민계획단대표, 서울연구원 ■ 2040 서울플랜 사무국

구분	내용	2030 서울플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참여 방식	시민 참여 형식 및 방법	- 오프라인, 직접참여 프로그램 중심 - 석학초청 기획토론회 개최(6회) - 시민참여단, 일반시민 및 학생 등 2030 서울플랜 홈페이지, 페이스북 운영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직접 → <u>직/간접참여로 방식과 범위 확대</u> - 서울미래포럼 개최(2회) - 시민 홍보대사 운영(서포터즈)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연계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서울시	-	- 서울시 관련 실·본부·국 방문 면담 실시('20, '21) 5개 분과 운영 시 관련 부서 참여 - 서울시 관련 실·본부·국 서면 의견 수렴('22)
	자치구	- 자치구 워크숍(2회) - 설명회	- 권역별 워크숍 2회('20, '21) - 권역별 서면 의견 수렴('22)
여건 변화	내용	- 고령인구 및 1·2인 가구의 증가 - 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 심화 - 대도시권 차원에서 경쟁 심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 개발가능지 부족 및 시가지의 집단적 노후화 진행	- 여건변화 -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 글로벌 기후·환경 이슈 -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 새로운 첨단기술 선점에 대한 경쟁 - 글로벌 팬데믹에 의한 사회 전 영역 영향 - 일상의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 - 공간정책과제 - 시가지 공간포화 - 새로운 미래 인프라(UAM 등) - 도시정비 정책, 환경 악화 - 도시계획 규제 완화 요구 증가
미래상	미래상 선정	- 설문조사(2회) - 일반시민 토론회마당 개최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설문조사 및 시민 자료 공개 - 기초현황 및 쟁점 이슈분석	('19)미래이슈 설문조사, 기초현황 및 쟁점 이슈분석 ('19) 참여소외계층 인터뷰 및 의견수렴+시민계획단 회의+시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22) 여건 및 시정변화에 따라 미래상 수정·보완을 위한 대시민 설문조사 실시
	미래상 결정	시민참여단(100명)이 직접 제안 및 결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재)조사 - 조사대상: 만 16~65세 서울거주 시민 - 표본 수: 1,000명

구분	내용	2030 서울플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조사내용: 서울에 대한 평가, 여건변화, 공간정책방향, 미래생활 및 공간변화
	미래상 문구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 도시	<u>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u>
	핵심 가치	소통, 배려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핵심 이슈별 계획, 전략 계획	체계	5개 핵심이슈, 17개 목표, 60개 전략	<u>6개 부문별 전략계획</u> (23개 목표, 67개 전략)
	차이점	‘복지’, ‘교육’, ‘성평등’, ‘양극화 해소’, ‘차별방지’, ‘공동체’, ‘권리’ 등 시민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 논의 - 시민의 행동력과 실천 강조	- 서울시 실·국·본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지침에 될 수 있는 <u>‘서울형 부문별 전략계획’</u>으로 구성 ‘미래상-6대 목표-부문별 전략계획’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하여, 실·국·본부에 사업실행 근거 제공
공간 구조	중심지 체계	<u>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2지구</u>	
	차이점	- 다핵의 기능적 체계를 강조한 중심지체계로 개편 [높이] 서울 전역에 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 기준표에 따라 관리	- 중심지 체계는 같되, 기능의 고도화 강조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 연계안 제시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취지에 맞게 관리 [높이] 정성적·유연적 가이드라인 제시 (절대적인 수치 기준 삭제)
실현	실현화 방안	- 계획체계 조정·보완 -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 재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설정	- 계획체계 조정·보완 -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재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붙임 3> 공청회 주요 의견 (자료: 도시계획과)

☐ 공청회 개요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일 자 : '22. 6. 24. (금) 15:00~16:30(90')
- 배 석 : 전문가(4인)
(공 간) 김현수 교수(단국대), (부동산) 이창무 교수(한양대),
(교 통) 고준호 교수(한양대), (환 경) 윤동근 교수(연세대)
서울시(1인)
조남준(도시계획과장)
서울연구원(1인)
김인희 선임연구위원

☐ 참석자 총계

- 참석자 명부 기준, 총 194명 참석

구분	일반 시민	서울시	자치구
계	143명	37명	14명

- 공청회 의견서 기준, 총 257명 의견 제시

구분	일반 시민	조합	비고
계	30명	227명	조합의견 중 한남3구역, 217명

☐ 전문가 의견

○ 이창무

- 서울은 중심도시로써 경기, 인천을 포함한 계획 수립이 필요
- 서울시 인구감소는 쇠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서울의 평면적 확장은 제한이 있으니 입체적 확장에 따른 수요를 담아내는 것이 과제
- 규제완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 상충,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 존재

○ 고준호

- 삶의 질,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고 다듬어야 할 필요성
- 생활SOC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길 정비 등 보행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 교통시설 지하화에 대하여 재원마련, 공사중대책 등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필요
- 새로운 모빌리티와 물류체계에 대한 세밀한 고민과 기존 교통수단과의 충돌 및 환승 등도 함께 고민할 필요
- 개인 승용차 감소정책이나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계획으로 추진 가능

○ 윤동근

- 기후환경에 대하여 부문별계획에 담겨있기는 하나, 공간계획과의 적극적 연계가 다소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해외 대도시들도 기후위기에 대하여 큰 의제 및 계획으로 담고 있음을 참조

☐ 시민 의견(의견서 포함)

○ **사람과 시민 복지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논의 필요**

-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물리적, 경관적 계획 위주에 대한 아쉬움
-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계층, 젠더, 세대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불평 등, 실업률, 신산업 등 세분화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에 대한 프레임이 명확치 않음,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복지계획이 기본계획 안에 필요
- 외국인에 대한 포용을 기조로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 및 소프트한 정책, 아이디어 필요
- 형식적인 공청회보다는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도시계획에 대한 빠른 시행 필요성**

- 높이 및 스카이라인 관련 결과를 연내에 빠른 시행 필요
- 남산고도제한 완화 및 경관지구 관리방안 제시

○ **천편일률적인 도시보다는 다양성 부여 필요**

- 다양한 공동주택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현상공모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공공(시정부)에서 저층주거 단지 계획 및 운영
- 다양한 도시모습 확보를 위해 도심 개발 규제 필요

○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 관련 의견**

- 소하천 정비로 인한 시민 불편과 생태계 교란 우려
- 한강변 북측의 수변 활용도 제고(강변북로, 철도 지하화 고려)
- 복원 예정이 있는 지천에 대한 고려 및 연계 필요

○ **기후환경 관련 의견**

- 폭염, 환경문제, 기후위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 취약
- 환경문제는 추가보완적인 논의보다도 전체 구조에 편입 필요

○ 기타 의견

- 4대 혁신축 중 감성문화혁신축을 서북부지역을 고려하여 연신내 및 불광까지 연장 필요
- 철도 차량기지 이전 및 철도의 지하화 필요

☐ 시민 의견(조합)

○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남산고도제한 완화, 지형 및 옛길 보전 원칙 폐지
- 재개발 사업장 내 블록조정의 용이성 부여
- 보광역 등 신규역 신설
- 재개발 규제 완화

○ 선유도일대 특별계획구역

- 선유도역 롯데칠성 부지 청년임대 주택 건립 반대
- 계획 전면 취소 및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필요

○ 금호2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대상지 가이드라인 필요

○ 잠실주공5 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계획 부지 내 용도지역 통일 필요
- 소수 이익을 위한 거대상가, 관통도로 폐지 등 정비계획안 수정 필요

○ 한강삼익 재건축정비사업

- 통영축 및 학교 일조권에 대한 제한 완화